

## 제2회

1. ④ 신고전적 조직이론인 인간관계론은 사회인관에 입각해 있으며, 인간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기계적 능률성, 공식적 조직구조,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은 모두 고전적 조직이론인 과학적관리론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2. ③ 토머스(Thomas)의 갈등관리모형은 단정성과 협력성을 기준으로 갈등처리방식을 회피, 수용, 경쟁, 타협, 협동으로 유형화하였다. 이 중 타협은 양 당사자 모두 어느 정도 양보하고, 어느 정도 양보를 얻는 단정적·협력적 방식을 말하며, 협동은 갈등 당사자 간 서로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형으로 ‘win-win’ 전략을 취한다.
3. ④ 설문은 매트릭스(Matrix)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매트릭스 구조는 계층적 특성을 지닌 기능구조(직능 조직)와 수평적 특성을 지닌 사업구조(프로젝트 조직)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한 혼합적·이원적 구조의 상설조직이다.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구조에 소속된 구성원들을 사업구조에 활용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유연한 활용이 용이하나, 이중명령으로 인한 명령계통의 다원화로 조직원들에게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을 야기하여 혼란·갈등·좌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4. ②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하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5호-사적이해관계자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
5. ① 설문은 액션러닝(action learning)에 대한 설명이다. 액션러닝은 교육생들이 소집단을 구성하여 팀워크를 바탕으로 실패의 위험을 갖는 실제 현안 문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는 동시에 문제 자체와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행동학습(learning by doing)을 말한다.
6. ②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담당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또한, 교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교육부에 별도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며, 검사는 지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소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소청심사의 관할

행정부	국가 공무원	경력직	일반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	
			특정직	외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
				경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
				소방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
				국정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
				대통령 경호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
				교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
				군인	국방부 군인소청심사위
				군무원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
		검사	소청제도 없음		
특수경력직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방 공무원	경력직	일반	각 시·도 소청심사위 교육소청심사위(지방직 교육직렬)		
		특수경력직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입법부	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				
사법부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				
현재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				
중선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청심사위				

7. ③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 ②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형태를 지닌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형태를 지닌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9.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결산제도는 국가재정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② 설문은 블록체인(Blockchain)에 대한 설명이다. 블록체인은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로 거래정보의 기록을 중앙집중화된 서버나 관리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된 형태로 배분한다.